인사갈등에 업무보고 파행…文-尹 충돌 전방위 격화

인수위, 검찰개혁 갈등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정부 이양작업 차질

문 대통령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당선인 직접 판단" 윤핵관 저격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난 대선의 최대 과제였던 국민 통합의 흐름도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 총재 임명 문제로 인한 격돌의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 이양작업에 대한 차질이 현실화했다. 정치권에선 신·구권력의 갈등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계속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면충돌하는 신·구 정권**=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며 윤 당선인과의 회동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를 하고 덕담을 하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며 이번 만남의 성격을 '덕담을 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이번 회동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것은 윤 당선인 측에서 '조건'을 내걸기 때문이라는 문제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신·구 권력 갈등의 책임이 윤 당선인 측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이라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구 권력의 인사권 행사 문제를 집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 비유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은 '인사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회동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회동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양측이 '마이웨이'를 계속하면서 회동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31일 준장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삼정검 수여식을 열기로 했고 윤 당선인도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한다"고 했다.

◇**정권 이양 차질 현실화**=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런 충돌 속에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검찰개혁·검찰독립성 문제를 두고 잦은 충돌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 무산은 양측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립을 위해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정부가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이미 부글부글한 기류가 관측됐다.

특히 박 장관이 반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표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윤 당선인을 정치권으로 끌어낸 이슈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력 반발한 끝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전날 공약에 찬성하는 대검찰청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겠다고 밝힌 뒤로도 법무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수위는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을 쏟아냈고 민주당에서는 주요 입법과제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조치에 박차를 가할 태세여서, 검찰개혁(發) 대치전선은 신구권력 충돌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 문제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대립이 첨예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강행될 경우 신·구 권력의 충돌은 출구를 찾기 어려운 파국을 향해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당선인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이는 저출산 문제 안풀려"

"국가 발전은 지방 발전에 달려"

총리 후보 생각할 상황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잘 못 느끼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며 "(저출산은) 고령화와 동전의 양면이지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의 경력 단절, 이런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과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을 해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 여기에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 발전은 결국은 지방 발전에 있다"면서도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의 속도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찾아내야 하고, 중앙 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첫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출범해서 일을 시작했으니 나도 같이 생각을 보탤 일들이 있다. 총리 후보, 내각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분간 총리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른바 '김부겸 유임설'에 대해서는 "(김 총리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서도 "내가 총리 후보에 대해 아직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중용했듯이 윤 당선인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호남 인사를 국민통합의 명분으로 초대 총리로 기용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취임식 광주에서 여는 것도 검토했다"

박주선 취임 준비위원장 인터뷰

취임식 화합 메시지 담아

"윤 당선인 5·18 기념식 참석"

"호남 총리는 민주당도 동의할 것"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희망의 정신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식 장소 선정 과정에 동서화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광주지역 장소 등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취임식 장소로 정한 것에 대해 "새 시작을 알리는 봄, 5월 10일에 개최되는 취임식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위해 취임식을 광주에서 거행하면 좋겠다는 방안이 검토됐다"면서 "하지만, 인원 수용 능력 장소와 전국에서 오는 참석자들의 교통·숙박 시설 불편, 취임식과 동시에 이뤄지는 당선인의 국정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취임식 장소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인도 장소 검토 과정에서 '광주에서 하면 좋았을텐데'라고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취임식이 열리게 될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우천 시에는 국회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최대 4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취임 초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된다"면서 "이에 윤 당선인이 '꼭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당선인의 (5·18 기념식 참석)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근 당선인 인수위에 광주·전남 인사들이 전무하는 등 호남 소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당선인의 인사 철학이 능력과 경륜, 자질, 철학 등이 우선이다 보니 지역별 안배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은 것 뿐이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당선인의 신념과 철학은 확고하다"면서 "이를 위해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특위, 국민통합위원회 등을 신설해 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사가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광주·전남이 정책적으로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면서 "우려가 있다면 저라도 호남의 창구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윤 정부 초대 총리 인선과 관련해 "저의 입장에서는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밀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은 확고하지만, 총리 인선은 능력과 자질은 물론 인사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호남 출신 총리가 지명되면 민주당에서도 호남의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 거부는 힘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